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인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1일 (목)  
제 26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2.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3.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이라크를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고 김선일 씨 장례식에서 울려 퍼진 유족의 '용서와 화해' 메시지는 평화를 위한 저항의 꽃씨를 국내는 물론 온 누리에 퍼뜨리고 있다. 30일 고 김선일 씨를 추모하며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전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라크에서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에 항의하는 집회를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28일 미군이 주도하는 이라크 점령당국은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주권'을 '이양'했지만, 사실상 '사기극'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관측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라크에 외국군이 16만 명이나 주둔해 있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도 없으며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를 누가 이라크 정부라고 믿겠느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임명한 총리 알라위는 미국 CIA의 첩자이고, 대통령 알 아와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국장은 "이라크에서 침략군이 물러나야만 비로소 이라크인들에게 이라크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라크에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점령군이 우선 철수해야 하고, 이라크의 미래는 이라크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점령군으로 한국군이 파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최근 항공사 노동자들과 운송·하역 노동자들의 파병물자 운송·하역·취항 거부 선언을 적극 지지했다. 결국 이런 힘이야말로 정부의 파병철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하효열 교육선전 실장은 "항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최근의 사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나아가 승객,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므로 취항거부 선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반전평화 메시지도 낭독되었다. 이라크 반전평화활동가 압델 아미르 레카비 씨는 "전 지구적인 전쟁전략을 지금 저지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단지 이라크 민중을 위한 연대를 넘어 전체 인류를 위한 투쟁"이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또 광화문 동화문세검과 교보문고 앞에서는 "우리는 전범국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피스몹'이 진행됐다. 피스몹에 참여한 시민 나비 씨는 "집회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표현하고 싶었다. 피스몹은 구호나 노래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8시부터 광화문에서는 '김선일 추모, 파병철회, 미국의 기반적인 이라크 민정이양규탄 범국민대회'가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김선일 씨가 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추가파병을 위해 김선일 씨를 재물로 마치는 않았는지,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라크파병을 철회 시켜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대한민국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입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에게 1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임을 밝혀왔다"라며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나"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 남북의 관계가 변했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중적 상황은 "사회 전체를 '정신분열'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재판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송 교수는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다라면 좋았을 내용을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입국 이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최면제의 기능을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앞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송 교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각성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고 재판은 이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탈북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 탈북자의 규모를 1999년 정부는 1만~3만 명으로 보았고, 같은 해 '좋은벗들'은 최소 20만 명, 2003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루드 투버스 씨는 10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탈북의 원인도 시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성공시대 사회학 김귀옥 연구교수는 시대별 탈북자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이념적 이유로 탈북을 했던 1980년대까지 1세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 2세대, '경제적인 조건'을 찾아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최근 3세대가 그것.

탈북자들이 북 사회를 이탈한 후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2002년 『북한인권 백서』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실태로 △노동착취와 강제노역 △인신매매의 위험 △체포와 강제송환 △간강 파괴 △아동의 교육기회 제한 등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벗들 유수 대표는 최근 변화된 상황으로 △식량난 및 경제난의 장기화에 의한 탈북 원인의 변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체류지역의 단속 강화와 신변위협 △전문중개업자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과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외 탈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국내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 또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북에 대한 지원이 식량지원과 같은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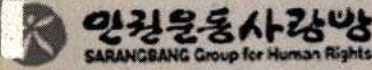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복구, 원자재난과 에너지난 해결 등 개발구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조용한 외교'와 '소극적 외교'는 다르다"며 "실제로는 '조용한 외교'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2일 (금)

제 26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2.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3.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상범 위원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연한 노동자"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던 130여 명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일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아래 전국시설노조) 고려대시설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숙 지부장은 "시각이 반"이라며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힘있는 노조를 만들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또 고려대시설지부 한 조합원은 "한때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고려대는 청소 용역회사의 재계약을 계기로 교대제·시간제 도입을 통해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미화원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 '고용 승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학교 당국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고려대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했다. <6월 26일자 인권하루소식 참고> 지난 5월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학교측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한 바 있다. 이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설노조 구권서 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절망과 체념의 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전국시설노조 청주대시설지부 강수분 지부장은 "청주대에서는 1년 전 몰래 숨어서 노조를 결성했다"며 "고려대는 잔치분위에서 노조창립총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마냥 부러울 뿐"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인문계 캠퍼스의 청소용역을 도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아이서비스'가 태도를 돌변, 학교측에 "용역을 맡을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아이서비스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라 지금의 용역 계약비로는 원가도 나올 수 없다"며 "비용 부담에 있어 수지가 맞지 않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와 용역회사 사이에 비용 문제로 계약이 지연되면서 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교육부장은 "지금과 같은 간접고용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 불안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대의 청소용역 정책을 꼬집었다.

<기사 처음으로>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보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정

보시시스템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보인권단체들의 도입 요구를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됐고, 지난해 뜨거웠던 네이스 논쟁을 거쳐 지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히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지만 위험성이 많다. 정보주체는 정보수집자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경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는 2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네이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참여 제도에 비중이 실린다. 공공참여 제도는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사회문제와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합의과정을 거쳐므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 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도 적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 6월 정보통신부가 예고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가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양날의 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우선 우려되는 것은 영향평가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기술도입 사업의 정당화의 수단이나 선전물로 쓰이는 것"이라며 "영향평가를 통해 사실과 다른 편리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역기능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기관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 평가 자체가 처벌이나 시정 조치 등 어떠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한계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권 침해 정도를 수치·등급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거나 평가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이은우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등 정보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제도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났다.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다. 1기 때 '불능'이었던 정은복 사건을 '인정'하고, '기각'이었던 허원근 사건을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의문사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과거 군사독재권력 하에서 자행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의문사위의 2기를 마감한 지금, 1기 의문사위(2002년 4월)부터 의문사위를 지휘해온 한상범 위원장을 만났다.

### ▶ 2기 위원회를 끝내며 감회는 어떤가

안에 들어와 일해 보니 개혁 반대 세력이 엄청 세다. 개혁의 타깃이 되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해방은 조직적인데, 개혁으로 돌파해야 할 세력은 막연하고 순진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다. 우리사회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민일반이 개혁에 대한 인식이 진지하고 깊거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위원회 법 보장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 못지 않게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은 일종의 투쟁이다. 현실을 뚜렷하게 알아야지, '막연하게 잘 되리라, 명분이 있으니 되리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 장준하, 박창수 사건은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위원회도 비중을 두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건은 이번에도 '불능'이 됐다.

장준하 사건은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정치학살이다. 아직도 정보공안기관의 구시대적 조직 기류, 분위기, 전통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 박창수 사건은 정경유과 독재정권 하에서의 치안대책적 탄압의 산물이다. 이런 박창수 사건을 '노사문제' 혹은 '사법적인 개인간의 재산싸움이나 노동분쟁'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이고, 정치 문제이고, 공법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식이 의문사위 안에서도 부족하다. 한편으

로 의문사위 기구정비와 자체 역량의 한계도 문제이다. 의문사위가 대결하는 적은 '정 풍도를 휘두르는데 (국회가) 우리에게 '찌꺼갈' 하나 쥐어준 게 전부다. 그 칼도 칼날 이 서 있으니 대들어 보라는 격이었다.

▶1기에서 기각됐던 허원근 사건이 불능결정 됐다. 민주화운동의 관련성과 의문사의 규정에 대한 견해는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할 때 탄압 받고, 재판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증거를 남길 수 없었다. 10년, 20년 지나서 투쟁의 증거를 대라, 더구나 죽은 사람을 놓고서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기한, 인력 등이 충분하지 못해 '불능'이 됐다. 또 민주화운동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권력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을 두어 구제하고, 국가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배상이 현재 10년 시효인데, 시효에 관계없이 구제해야 한다.

▶의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용은 권한강화와 시한을 충분히 주고, 위증이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거부 사유 소명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우선 이렇게라도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다.

▶의문사를 비롯해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청산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일제시대 친일파나, 그 후손이나 아류들이 해방후 미군정이나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나 폭정의 주역이었다. 폭정 하에서 주로 도구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그 이전의 사회안전법 기타 특별법이 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그 외의 부속법령을 모방한 것이다. 과거청산은 친일청산부터 해방 후의 독재잔재청산까지 해야 한다. 또 법을 장식이나 간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구를 내설 있게 하고 기구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기 위원회 활동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한다. 내가 미흡했던 것을 새 안목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권한·시한 뿐 아니라 조직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3일 (토) 제 26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2.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3.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던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중요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체제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헌법과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조문 등을 세심히 따져보더라도 의문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우리는 사상전향제도와 같은 반민주·반인권 제도에 저항하였던 그들의 희생을 늦게나마 올바르게 평가한 의문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유신 치하의 전향공작 책임자를 규명하고, 다시는 반민주·반인권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의문사위의 결정을 짚아 내리는데 여념이 없는 수구언론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의문사위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정을 비롯한 제반 여건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는 '이라크 전쟁의 대가 : 쌓여 가는 비용'이라는 보고서(http://www.ips.org)를 통해 이라크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가 9천436명에서 1만1천317명(2004년 6월 16일 현재) 사이이고, 부상자는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보건문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걸프전쟁 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

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많은 미군 병사가 질병에 걸렸고, 남부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공격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었고 방치된 미폭발 폭탄이 이라크 국민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지뢰와 미폭탄 폭발로 인해 매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에서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며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사건이 2003년에 35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저녁에 외출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연합군임시정부가 시행한 조사를 인용해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령 상태에서 "이라크인의 80%가 미국민간인 행정부나 주둔군을 신뢰하지 않고, 55%가 미군과 외국군대가 철수할 때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적 피해 뿐 아니라 이라크의 실업 증가, 재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미군 기업의 전쟁이익 쟁기기 등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유엔헌장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해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유엔의 권위를 와해시킨 점,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이 90%에 이르는데도 파병을 강행토록 압박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는 점 등 전 세계에 미치는 '악 영향'도 꼬집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 흐름과 쟁점

####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고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했다.(6/21) 한국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웅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를 반복해 의혹을 더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또다시 테러방지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일 씨 추모, 정부의 파병철회 촉구,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민정인양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6/30)

#### 2. 최저임금으로 살만 하십니까?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출범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서 저항하는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6/3) 이어 대학 미화원 노동자·이주노동자·산재노동자 등이 2차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경련, 한나라당 등을 항의 방문하고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까지 행진했다.(6/5)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2.6% 인상을 제시,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6/17)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한 최저임금연대는 25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문화제 및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6/25)

#### 3.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 찾는 대학 청소 노동자

청소 용역 제입찰을 앞두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고려대와 용역회사에 대해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과 '불철주야' 학생들이 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6/7) 고대 학생들과 '불안정노동과빈곤에서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 노동·인권 단체들이 본관 앞에서 학교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후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한시적 농성을 벌였다.(6/18) 최초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도 학교를 상대로 항의 집회에 나섰다.(6/25), 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7/1)

#### 4. '지문' 정보, 모아 놓고 보니 쓰고 싶어 안달 났네

강남구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6/9) 행정자치부는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보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6/14)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과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날인제 도 폐지"를 촉구했다.(6/18)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6일 (화)

제 26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2.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3. ● 최해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들!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장애인과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온 한 학부모는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을 만들 공간과 예산이 없다'며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 약 75%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에 가더라도 언제든 쫓겨날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박애이데올로기'는 장애인들에게 넘어서야 할 과제일 뿐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만 이용했었을 뿐 구체적인 정책도,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소극성을 꼬집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 확대 배치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결성 1주년이 되는 15일을 전후로 11일에는 '교사결의대회', 15일에는 '교육주체(부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한국장애인대학생연합 주최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농아인대학생 국토대장정'은 20일까지 계속된다.

<기사 처음으로>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기독교 최대종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아래 예장인권위)가 2일 병역거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던 예장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장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교계의 입장을 밝혀 신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기

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공청회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 3인씩이 초청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종파를 떠나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고, 기독교전통이 평화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세대 교목실 정종훈 교수의 주장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여호와 증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신념, 평화에 대한 마음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정종교만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교단 내에서도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안돼'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로회신학대학교 맹용길 교수는 "누구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 방식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 최삼경 상담소장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의 인권 때문에 나머지 절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절대 다수의 희생적 선택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소수인권존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권이기주의에 경도된 듯한'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의 아쉬운 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여전히 특정종파의 반사회적 행위로 낙인찍어 인권의 관점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대립시킴으로써 이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견고(?)한 이분법으로 논의가 진행돼, 감옥 외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병역거부자들을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찬반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한 애초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입장차이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대통령소속 의문사친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한' 반발을 샀다. 가장 즉자적인 반응은 보수단체들의 집회였다. 이미 6월30일로 활동을 마친 의문사위 앞에서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했고, 분단의 또 다른 '희생자'를 자임하던 복과 공작원들은 "의문사위는 전원 할복 자결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유해를 부관참시하라"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보수 언론은 비교적 점잖게 '법리논쟁'을 중계하고 있다. 여러 외부 기고글과 칼럼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가장 거친 주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법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다. "빨갱이는 고문해도 된다"는 1990년대 한 장관의 저열한 인식수준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의문사위의 논리적 오류를 주장하는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죽음이 가혹한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적인 죽음으로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다는 의미를 떠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요체는 개인이 갖고있는 내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일이다.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 바꾸려는 야만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죽어갔고, 이들의 싸움 덕에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사상전향제가 폐지됐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엄연히 실정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른 체제에서 왔다고 이들의 행위와 목숨에 차별을 두는 이분법이 무섭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과연 완결됐다고 보는지 묻고싶다. 이들에게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한 운동'이라는 단순한 의미이며, 이미 과거형이다. 민주화를 '기념'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해준다고 해서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보는 것일까.

한층련 학생들은 수배와 구속을 반복하고 있고,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송두율 교수는 1평 감방에 갇혀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건을 보고, 서점에서 팔고있는 책을 사다 읽은 대학생들이 '이적표현물 소지'로 구속되는 세상이다.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폭력은 197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인 독제가 끝나고 삼청교육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해석한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독선과 아집이 섬뜩할 따름이다.

©최혜정 님은 <한겨레21> 기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1. 호시탐탐, 엿보는 테러방지법

열린우리당,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재추진 입장 밝혀...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가 씨 피살됐나"며 열린우리당 질타, "파병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6.28)/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성명 통해 '인권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미군 등 이라크 점령당국, 이라크 임시정부에 '은밀히' 주권이양... '권한 없는 주권이양' 비난 여론 일어(6.28)/ 김선일 씨 장례일 맞아 추모집회, '이라크 주권 이양의 허구성'을 꼬집는 집회 곳곳에서 개최(6.30)/ 인권사회단체,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며 서울 종로에서 파병철회 피스몐 진행(6.30~7.2)/ 사회 각계, 파병철회 한 목소리...노동자, 보건의료인, 교수, 영화인 등 성명·집회 이어져(6.30~7.3)

### 3. 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 만들다!

고대 미화원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대 본관서 집회(6.28)/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결성/ 고려대 청소 용역 업체 '아이서비스' 수지타산을 이유로 철수 밝혀(7.1)

### 4. 의문사위 결정 물고 늘어지기?

의문사위원회, 1기에 이어 장준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6.28)/ 옥사 장기 수 손윤규, 최석기, 박용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근...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7일 (수)  
제 26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보아야 한다?
  2.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3.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4. 알림 <8회 인권영화제 배급 비디오>

##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보아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결정(기각:7, 인정:2)을 내렸다.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위 김삼용 위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사람들이 사회안전법 등 폐지를 요구하며 숨졌을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반독재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희영 사무처장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유가족대책위 김학철 씨도 "변형만, 김용성 씨가 남파공작원출신이라고 해도 이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한 후 보안감호 처분으로 재수감된 상태에서 강제전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이들의 죽음으로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가 폐지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의문사위가 지난 2002년 10월 25일 이 사건을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했는데도, 최근 보수언론·단체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자 6일 발표한 것은 용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형만, 김용성 씨는 1957년 남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한 후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청구보안감호소에 수용되던 중 1980년 7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감호소측이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제급식을 실시하던 과정에 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의문사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항고제도는 검찰 내부 절차라는 한계, 재정신청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독점적 '공소제기' 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혹은 현행 재정신청제도, 시범 시행중인 항고심사회의 전면확대 등 외국의 제도 및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대)배심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기소를 인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검찰심사회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경우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본에만 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사법절차에 국민 일반의 양식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대 법학부 조국 교수는 "현재 '공소제기' 권한을 전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결정이) '민주적이나' 혹은 '정당하나'에 일반인의 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보완하기 위한 법무부의 제도 도입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현재의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방안보다 무게를 두었다. 유선정권 이후 그 범위가 크게 제한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재정신청제도의 애초 목적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권하루소식> 2004년 5월 29일자 참고)

정미화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로, (국민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기소(대)배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검찰이 자신 없는 사건의 기소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완결되지 않은 사건의 기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개선되거나 사법 정의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대)배심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취지와 달리 기소(대)배심제도가 검찰 기소·불기소의 틀러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경고이다.

한편,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검토하며 다음달 배심·참심제를 재현하는 모의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법에 국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 처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씁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만 4년 30일만에 다시 KBS 자회사로 복귀했다.

"복직을 축하한다"는 인사에 주 위원장은 극구 '복직'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KBS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KBS에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라 도급회사로 원직복귀한 것이므로 '복직'은 아니라는게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의 아쉬움은 "파견 철폐를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복귀한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주 위원장은 "파견제에 의한 간접고용의 상황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고용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KBS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노동자다.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은 애초에 인력회사인 자회사에 고용되어 모회사인 KBS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96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렌트카 회사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되면서 KBS와 렌트카 회사, 렌트카 회사와 인력회사, 인력회사와 노동자, 이렇게 삼중의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이중의 착취 구조 속에 갇히게 되었다. 모회사인 KBS가 파견업체에게 준 돈에서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을 각종 명목으로 떼고 나면 노동자는 어느새 저임금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6년에 접어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해 노동자들이 2년마다 반복적으로 해고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파견법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2년 이상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했으나, 현실에서는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합법적으로 해고당하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주 위원장도 파견법이 시행된 2년 후, 2000년 6월 30일 해고당했다.

주 위원장은 "10년, 15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딱 3개월만' 투쟁할 거라 생각하며 파견철폐 투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2001년 6월부터 KBS가 렌트카 회사, 인력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으면서 이중 착취구조가 없어지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다른 현장으로 취업해 떠나면서 2002년에는 정말 그만 둘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주봉회 후원회'를 꾸려 올해 6월까지 계속 후원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할 때 어둠의 길목에 선 못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반딧불 희망을 새겨준 동지들이 고맙다"고 전했다.

현재 260여 명의 KBS 운전직 노동자들은 '방송차량 서비스'라는 KBS 자회사에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따라서 2년마다 반복됐던 해고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BS가 58세까지 정년을 약속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지난 4년여 동안 파견철폐 투쟁이 있어왔지만, 투쟁을 통해 수십 개의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져도 외롭고 소외된 싸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주 위원장은 토로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조직된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비정규직이 모두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아직 적응이 잘 안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 비정규직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파견 철폐의 끝나지 않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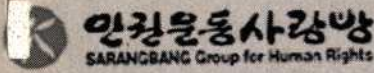
## 알림 <8회 인권영화제 배급 비디오>

아나의 아이들 2003/ 84분/ 30,000  
 나의 혈육 2003/ 83분/ 30,000  
 난민캠프 2002/ 47분/ 20,000  
 저항하라 2003/ 90분/ 30,000  
 기업 2003/ 165분/ 35,000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8일 (목)  
제 2610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2. 복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없어
  3.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차별과 노동감시로 퇴출 시키겠다?

### KT 상품판매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 대회

KT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내 최대 통신기업 케이티(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감시 행태가 폭로됐다. 전국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KT 상품판매팀(아래 상판팀)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별 및 노동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을 알렸다.

#### KT는 왜 '상품판매팀'을 만들었나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한 KT는 같은 해 12월 전직거부자, 명예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일반 전화개통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판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상판팀 직원들은 일반 영업직원과 달리 △업무지역 미배정 △판매상품과 기업카드 미지급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일일활동실적 제출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불허 등의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이 인권회의의 조사 결과이다. 인권회의에 따르면, 올 4월 발원된 '상판직원 소탕작전' 문서에서 상판팀의 최종목표를 '퇴출'로 명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권회의는 "상판팀 구성 및 운영이 노조전력자나 명예퇴직거부자 등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차별과 감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 감시와 미행으로 정신질환까지

전북 지역 상판팀 최모 씨는 4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미행하는 것을 인지했다. 미행을 확인하기 위해 우회, 정지, 유턴을 반복하던 최 씨는 미행 차량의 번호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확인한 결과 미행 차량은 KT전북본부 직원의 차였다. 전북의 박모 씨는 몰래 사진촬영까지 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사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됐다. 증언대회에 나온 노동자들은 KT의 이러한 감시와 차별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만 둘 때까지 인사 발령한다?

18년간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충북 지역 상판팀으로 인사 발령된 이모 씨, 이 씨는 이미 2000년 12월 한국통신(KT) 파업에 참여한 직후부터 '원거리' 인사 발령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에서 1시간 20분 가량 걸리는 음성전화국으로, 7개월 후에는 2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는 제천전화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씨는 자신의 집 대문에서 6m 이내에 'ㄱ' 전화국이 있다'며 KT의 의도적 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현재 아무 연고도 없는 충주지역에서 상품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수도권지역의 유모 씨는 2001년 114분사와 2003년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년간 무려 8차례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인사 발령 후, 3일만에 다시 인사 발령되기도 했다. 더욱이 기술직이나 내근직이었던 노동자에게 상품판매를 위한 교육이나 최소한의 적응기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물건을 들고 나가라'라는 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일반 영업직원과 차별 또 차별



영업 실적 차이는 작은 전보뿐 아니라 사측에서 제공하는 무료폰, 보조금 지급 등으로도 발생했다. 동일한 휴대폰 기종을 팔더라도 일반 영업직원에게 지원된 무료폰 개통을 상관팀에게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회의는 설문 결과 사측은 실적 저조를 문제삼아 상관팀에게 '시간대별로 일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영업직보다 높은 개인별 매출목표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지난달 KT노조는 '상관팀 해체'를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지만, KT사는 그간의 차별과 노동감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회의는 지난 2일 KT사에 항의한데 이어 이날 증언대회를 열고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인권문제를 제기한 상관팀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촉구했다. KT는 7일 인권회의의 소속 단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 자체'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증언대회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여론조성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 처음으로>

##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안식처였던 '쪽방'이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조성이라는 명분하에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2003년 10월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 1동 쪽방을 철거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영등포 2동 철거계획이 보도되자, 빈곤사회연대(준) 등 5개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역 주변인 영등포 2동에는 50~60여 개의 쪽방이 밀집해 있고, 130~1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쪽방에 대해 철거를 중단하고 용도전환을 금지하기 위한 긴급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중주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주택은 단신생활자와 2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원룸형태의 주거공간이다. 영등포역 및 서울역 쪽방에 대한 철거계획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 절망에 휩싸이고 있다. 영등포 2가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김학식 씨는 "영등포 역전을 중심으로 5백 미터만 지나면 보증금 없이 들어갈 방이 없다. 쪽방이 철거되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노숙이라든지 자살 같은 극단적인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제일 시급한 것은 단 1평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다. 철거 철거를 해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안적인 공간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은 11.47%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으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개고의 1.5%에 불과해 6만여 명의 대기자는 '공가(空家-퇴거가 되어 빈집이 된 상태)'가 발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인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을 찾게 된다. 서울의 경우 역주변에 밀집된 쪽방은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여 개가 증가한 4,247여 개이고, 전국적으로는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중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준) 등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2인 이상 가족을 위주로 한 다가구 주택에 국한되어, 쪽방,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영등포구청 공원녹지와 라옥임 씨는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등포 2동 쪽방은 철거하지 못한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보상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립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립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립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립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어 왔고 국고보조금이 온갖 비리로 새나가고 있으며 재단 산하의 부원 농장은 강제노역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 △군 출신 무자격자 채용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그린벨트 훼손 △담당공무원들의 부실감사와

유착 등을 폭로했다.

공대위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성람재단 측은 "'강제노동'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이 전국급속노조 산하 성람분회를 결성해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일체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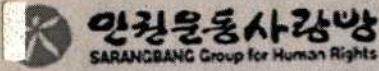
공대위는 "종로구청, 서울시청 등 성람재단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재단이 제공한 호화 콘도에서 접대를 받으며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부실감사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예바다 학교 권오을 교감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대부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며 "비리의 끈을 끊어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사회복지과 임명택 씨는 "신원확인이 안되는 전화로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성람재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공대위는 △성람재단 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민주이사진 구성 등을 주장했다. 전국급속노조 산하 성람분회는 2003년 2월 결성된 이후 18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그 중 13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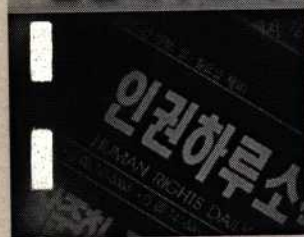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09일 (금)  
제 26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2. 학생도, 인권도 내팽개친 학교
3.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4.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제
5. [연대가 필요한 소식]

##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국내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8일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IV 감염인을 2천2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와 전파방지라는 미명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감염인의 명부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만약 소제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비밀비재하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에이즈 환자, 감염인으로 산다는 건 인권침해와 차별, 도덕적 타락의 결정체라는 낙인을 떠 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밝힌 채 1,2차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이들 스스로 치료약을 구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에이즈예방법'을 통해 HIV 감염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취업 시 감염인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고용주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에이즈예방법은 강제 처분, 취업 제한 등 온갖 차별과 억압, 불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에이즈예방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국내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인이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의 활성화를 통해 에이즈치료제의 무상공급을 요구하듯,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접근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에서도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협정과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이 주요 논의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4000만 명이 이르는 HIV 감염자가 있고, 에이즈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600만 명 중 560만 명이 치료약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브라질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은 에이즈 치료약을 싼 가격에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해, 이를 무상 혹은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자유무역협정(FTA)은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제네릭(카피)약 생산을 차단하고 있어 치료제 공급 확산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의 변진옥 씨는 "세계에서 올해만 800만 명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죽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사용되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약이 가져야 할 가치와 진실의 전부'라는 계 변 씨의 생각이다.

이번 국제에이즈회의는 '모두에게 치료접근권·의약품접근권'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일~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며,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 각국 정부관료 등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 학생도, 인권도 내팽개친 학교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학생이 결국 8일 대광고등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았다. 강의석 학생은 8일 오전 기말고사를 보던 중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지금 집 쟁겨서 나와라. 오늘부로 제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거다"는 말을 들었다. 7일에도 강의석 학생은 생활지도부장으로부터 '시험기간 중 교내·외 시위를 하지 않겠다, 7월 13일까지 전학을 가겠다'는 문서를 쓰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연미림 씨는 "학생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가 잘못을 해 놓고 학생을 내모는 꼴"이라며 "비상식적으로 나오는 학교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의석군 부당 징계 지지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 차원에서 대응논의를 해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 학생의 제적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아름다운종교사랑'에는 강 씨를 격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손영기 씨는 "기성세대이면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힘내세요"라며 강의석 학생을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

<기사 처음으로>

##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민간인학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된 곳이 몇 군데 밖에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청소년들도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요구했다.

제천 간디청소년학교(중학과정) 학생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등에 보내는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발표했다. 오은교(2학년) 학생은 "영동군 노근리에 가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100만이라는 숫자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는 사회참여 수업중 노근리 사건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알게 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서명을 받아 학생 83명과 교사 12명의 명의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17대 여야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한 통합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구성 등이 늦어지면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국민위원회는 "올해 전국 각지의 위령제에서는 군유가족들과 피학살자유족들이 함께 하는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 가는데 국회만 지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 피난민 폭격 사건과 대전,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 등에 미군과 정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범국민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고위 군부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학살이 자행됐다는 미국 공식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산내학살유족 정해일 씨는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아버지를 비롯해 사람들이 모두 학살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50년 넘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말도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한을 품어왔다"고 말했다.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법 제정은 상식이 되고 있는 데도 지난해 '법 제정 무산'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  
 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들고 나온 지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영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

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과병반대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진짜(?) 실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면,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총정리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 근본적인 결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 자료는 지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자료모음은 1. 경과 및 평가 2. 법안들 3. 의견서, 기자회견문, 성명 4. 토론회 자료 5. 국내의 인권 관련 기구의 의견 6. 관련 법령 7. 참고문헌 8. 언론보도 9. 국제 인권 논의 10. 타국의 인권적 문제 등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2003년 9~12월의 자료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고 있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일종의 백과사전 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비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침해한 사례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차원을 넘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과 제도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에 생물학적 정보 확대,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감시 확대, 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법안 핵심은 유지하려 했던 국정원의 집요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김선일 씨가 살해되었다'는 정부의 뜬금 없는 수작을 거부하는데 든든한 방패로 쓰일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 [연대가 필요한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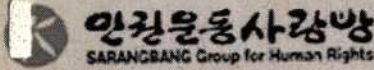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 라니 씨가 임신중독·고혈압 등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지난 7일 강남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로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라니 씨는 중태이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라니 씨는 출산비 정도의 돈은 마련해 놓았으나 갑작스런 응급수술과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급한 모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심과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069-19-42796-3 외환은행 603-02-197795 신한은행 <예금주:이금연>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10일 (토)  
제 26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2. 유엔, 북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3.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리'
4.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적'시켜 버렸다.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장과 태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려온 강의석 학생에게 학교는 퇴학으로 답했다. 이것이 '미숙한(?) 청소년'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자부하는 성인들, 기성대세의 참 모습인가! 이것이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학교가 보여야 할 본보기란 말인가!

강의석 학생은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너무나 명백한 인권침해에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해왔다.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그리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강의석 학생의 1인 시위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침묵을 일깨워줬다.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편적 권리임을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교도소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마당에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학교재량'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셈인가. 강의석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님을, 결코 이번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강의석'은 계속 나올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종교계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차마 몰랐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 소송이나 국가인권위 진정에 눈치보고 전전긍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루속히 구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사 처음으로>

유엔, 북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장 마이클 스미스 대사(호주)는 비탄 문타본(Vitit MUNTARBHORN)씨를 북 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한다고 9일 발표했다.

비탄 문타본 씨는 현재 태국 출라롱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1-94년 유엔 '아동매매와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동안 아동권 뿐만 아니라 국제법, 인권과 발전 및 민주주의에 대해 실천적 연구를 해온 문타본 교수는 태국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유엔 안팎에서 인권전문가로 인정 받아왔다. 문타본 씨의 임명소식을 들은 제네바 국제인권단체들은 '그의 오랜 국제적 경험과 외교적 친화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균형 있고 통합적 관점이 이번 임명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예상하면서 긍정적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사 처음으로>

##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9일 공대위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건설일용노조 집행부가 구속·수배된 데 이어 수사과정에서 표적수사 및 진술유도, 조작이 자행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역건설일용노조 조합원 19명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중)과 천안지역건설노조 조합원 2명(1심 진행 중)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해 11월에는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11명이 수배되어 지금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검·경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을 수사하면서도 노동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력계 경찰을 동원하고 노동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을 적용했다. 더욱이 무리한 '짜 맞추기'식 수사로 검·경의 '기획수사'에 의한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체소사를 벌여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현장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법 집행 주체가 원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건설현장 내 대부분의 노동조건, 환경, 복지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하청업체도 아니라 개인인 '오야지(심장)'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에서 △노동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할 것 △검·경의 편파·왜곡 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진상조사할 것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진정을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건설부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임금노동자 중 60%가 넘고, 간접고용이 원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북 인권에 관해 남한 인권평화단체의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가와 연구자가 한데 모였다. (가칭)한반도인권회의는 9일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북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기 위해 국내 인권평화단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59차·60차 유엔인권위원회(아래 유엔인권위)에서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 인권에 관한 관심과 실천은 남한 내 인권평화단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란 두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60차 유엔인권위를 참관,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편향되어 있는 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사회권 특히 식량권에 관한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수정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고, 국제사회 전반에 있는 반북 흐름을 거스르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강씨는 59차에 비해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다양한 남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유엔인권위에서 로비활동을 할 때 원칙과 입장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엔인권위가 인권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보다 특정국가를 거론하여 그 나라를 망신 주는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강씨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나 자유법안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보다는 정치적 힘겨투기와 긴장감만 더해 인권개선에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유엔을 활용하여 북 인권의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씨는 "북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인권 논의를 하고, 그 장구를 열어주기 위해서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기술협력기가 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몽골처럼 인권교육프로

젝트 등 비정치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올해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북 인권결의안은 북을 전담하는 나라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주 골자로 하며 임명된 특별보고관은 북 인권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 후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와 내년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정치연구회 서보혁 연구위원은 "특별보고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국가에 직접 들어가서 정부와 민간단체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국에 가서 정부나 민간단체를 만나 입장을 청취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나라별 특별보고관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미얀마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인권위 결의안에 의해 92년 미얀마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으나 미얀마 정부는 협력을 계속 거부했고 이런 악순환은 2004년까지 이어져 12년 동안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북 정부가 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전례를 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 이들의 우려이다.

한편, 국내 인권단체들이 북 인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씨는 "북 인권 개선에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북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접근 방향, 해결과제의 우선 순위, 공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씨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벗들 등이 서로 연대하는 방안은 어렵다. 그러나 주제별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라며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주제별 연대를 제기했다.

'한반도인권회의'는 미 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자유인권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 인권평화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북 인권 문제를 대상화하지 말고, 남한에도 존재하는 인권 문제를 인식한다는 취지에서 '한반도 인권'으로 이름 붙였으며, 북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대안적 해결법에 대한 내용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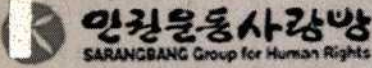
◎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는 다음주에 실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13일 (화)  
제 2613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2.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 전원 고용승계
3. ● 유익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4.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제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군 수사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쓴 충격적인 사건이 발표됐다. 12일 의문사위는 지난 2002년 특조단 조사에 참여했던 현역군인 A씨가 올 2월 의문사위 박종덕 조사 3과장 외 조사관 1인을 만난 자리에서 "박 과장 얼굴 옆 하늘을 향해 총을 쏘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소리가 선명한 녹취 테이프도 이날 공개됐다.

무엇이 두려워 총까지 쏘나

국방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특조단 조사기록을 A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문사위는 A씨에게 기록 제공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협조를 미루자, 의문사위는 지난 2월 A씨 집을 실지조사차 방문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2월 26일 오후 6시경 집에 있던 A씨의 차가 자료를 제공했고, 오후 7시경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집을 비웠던 A씨를 대구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녹취 기록에는 조사관에게 "(가져 간)기록 가져오라고 해",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을 꺼야"라며 외치는 A씨의 격앙된 목소리가 담겨 있다. 박종덕 과장은 "A씨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죄 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러한 의문사위 발표에 대해 A씨는 자신은 "가스총 공포탄을 쓴 것이고, 의문사위 조사관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는 또 3월, 조사과장 등이 특조단장이었던 현 1군사령관 정수성 육군대장을 만났을 때 정 씨로부터 "1기 의문사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지난 7월 의문사위 폼파 발언 및 조사관 협박과 관련해 정 전 특조단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전 특조단장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문사위는 A씨가 보였던 위협적이고 극단적이 모습과 정 씨가 의문사위에 가했던 협박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했다.

새로운 자료로 밝혀지는 은폐 사실

한편, 의문사위는 5월 7일 A씨로부터 라면 1박스 정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특조단 조사시 녹취한 참고인 진술과 디스켓 등 중요 자료는 파괴되어 받지 못했다는 것. 의문사위는 12일, 제공받은 서류분석 결과 "특조단이 허일병 사건을 재은폐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11월 특조단은 허원근 사망 사건 당일(84년 4월 2일) 오전 △현장에서 회수된 3발의 탄피가 모두 허 일병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고(1개는 3일에 발견) △분대장 복귀신고 등 정상적인 일과가 진행됐고 △총성은 10시 ~ 11시경에 3발이 청취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 입수한 자료 즉, 2002년 특조단이 조사하고도 의문사위에 넘겨주지 않았던 기록에 의하면 2002년 특조단의 발표는 '명백한 왜곡이며 은폐'라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조사 기록에 △당일 근무자는 물론 현병대 수사관조차 총성이 2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검을 맡았던 박 모씨는 4일에 '탄피가 2개뿐'이라는 현병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조단 조서관조차 '감정의뢰 된 총기가 허 일병 것임을 확신할 수 없고 총기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정수성 전 국방부 특조단장이 허 일병 사건을 재은폐하여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이번 사안에서 국방부의 태도와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 전원 고용승계

고용승계와 노동형태 변경 저지를 위해 투쟁하며 노동조합까지 설립한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쟁취했다.<2004년 7월 2일자 참조>

10일 노동자들이 고대 청소용역업체인 (주)제이디윈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오전 6시~오후 4시로, 식사와 휴식시간은 오전 9시~10시, 오후 12시~1시로 정해졌다. 또 시간외근로 수당도 약속되었으며 퇴직금은 퇴사시점까지 모인 적립금이 일시불 지급된다. 이전까지 노동자들은 정규 근로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시간외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인문계 캠퍼스의 경우 용역업체로 잠정 선정되었던 (주)아이서비스가 노조설립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주)제이디윈과 3개월 계약을 맺었을 뿐이어서 고용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받게되는 임금은 월 60만4,073원에 불과하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최저임금액 64만1,840원이 적용되는 9월 1일 이후에도 월 68만3,493원으로 인상될 뿐이다. 이에 비해 남성 노동자의 경우 같은 기간 월 64만6,154원과 71만3,493원으로 정해져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도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교육부장은 "단협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겠지만 칼자투를 쥐고 있는 것은 학교 당국"이라고 지적하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용역회사 뒤에 숨어 저임금이라는 야만을 고집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얼마 전 빈곤과 관련한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빈곤 아동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어린이날 즈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빈곤아동에게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이후에 그 아이들이 커서 범죄자가 된 후 대책마련에 드는 재정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했다. 3~4세 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후적 대책보다 7.16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범죄예방 등 사회비용 절감과 세금수입, 성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절감 효과 등이 들어간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과 재계 등의 입장도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일맥상통하는 것은 빈곤계층에 대한 관리와 이에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이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정부관계자는 노숙인 대책에 대해 잘라 말한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나"고.

빈곤은 단지 사회현상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용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 폭력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존엄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정한 임금과 복지, 의료, 물, 전기 등 필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 그리고 정치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은 인간존엄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런데도 빈곤의 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회의 뿌리깊은 인식 때문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이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권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자기를 위해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나온다. 사람들이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혹은 사회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을 때인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아직 권리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해결을 위한 요구가 '효율성'으로서의 대책 마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로써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 그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유익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기사 처음으로>

##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1. 우익 단결, 마녀사냥... 이번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복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기각 결정/ 상이군경 회원,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민주노동당에 항의방문... 집기 파손 등 불법 폭력 행사(7.6)/ 일부 극우단체 회원, 의문사위 위원들 "체포하겠다"...경찰청, 의문사위 위원 신변보호 들어가(7.9)

### 2. 노동자 탄압에는 회사안과 밖이 없구나!

인권단체연석회의, KT 노동자들과 인권침해 증언대회 열어... "KT가 명퇴거부, 노조 활동가를 대상으로 부당전보, 미행 일삼았다"라고 폭로(7.7)/ 구속, 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7.9)/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 3개월 이상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져(7.11)

### 3.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는 장애인 교육권 차별을 의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 정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7.5)/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1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성암재단 비리, 인권침해 폭로/ 국가인권위,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번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7.9)/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서울 종로에서 열려...행진 가로막는 경찰과 시위대 충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등 종교단체 회원 27명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강제연행 돼(7.10)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14일 (수)  
제 26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2.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3.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4.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헌성' 따져
5. 종교계 대표들, 양상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로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위치추적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가 현재 사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이 지불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날 고소장을 전달한 6명은 휴대전화의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위치를 추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 SDI 수원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김모 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고, 함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와 방식으로 위치가 추적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는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친구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불법복제'는 의혹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 휴대전화 업체와 상담한 결과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천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원에서도 동일한 번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휴대전화 업체 상담원이 '누군가가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고소인들은 "누가 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 등 8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실제로 삼성 SDI 수원공장 울산공장의 노동자들은 모두 노조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고,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현재 산재 문제로 삼성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또 김 위원장은 1996년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었고 현재까지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발신 지역이 대부분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집중되어 있고, 위치추적이 일어난 시간도 노조 결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인 퇴근 후 혹은 노동자들이 회합을 가진 날에 집중된 점도 의혹을 더하는 의미심장한 요소이다. 또한 고소인들은 짧은 시간에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위치추적이 일어난 점, 수원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천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다산인권센터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유출은 오직 본인 혹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학교로부터 제적통보를 받은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교 학생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모임은 '선언'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특정한 종교의식의 강요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 버렸고, 또한 그들 중 일부 학생들에게는 지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모임은 '△매주 1시간 종교의식을 강요받는다 △입학 시 특정 종교의식을 성실하게 받겠다는 선서를 한다 △기말 시험에서 특정 종교의 시험을 본다'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 군이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아름다운종교사랑'의 오프라인 모임인 '청소년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임 로이(ROY, Rights Of Youth)'는 17일 시청 앞에서 청소년 인권선언을 위해 청소년문화마당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북 인권을 둘러싼 중요 논의지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개입주의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은 바로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이 외화된 형태. 9일 한반도인권회의가 준비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에서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이 어떻게 북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집중 논의했다.

#### 미국의 개입주의가 불러온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철 씨는 "냉전 이후 단일패권세계를 확립한 미국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입주의 정책을 지속해왔다"며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입김이 높아졌고, 의회의 결정은 여야합의로 이뤄진 것이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결정은 오랜 시간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 정해지므로 한국정부 및 민간단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최근의 특징을 지적했다.

조 씨는 개입주의 정책수단으로 △국내외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낮은 단계의 강제수단부터 △반정부 방송 △원조 또는 뇌물의 제공이나 무역반대 △경제적 봉쇄조치 △군사적 봉쇄조치 △인권단체의 지원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자문 △제한된 군사행동 △전면적인 군사침공 등 높은 수위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이나 인권법안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군사적 조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에는 여론조성, 방송, 원조지원 반대, 인권단체 지원 등 비군사적 개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북한자유법안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제한적인 군사봉쇄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조 씨는 △북의 반발과 6자 회담에 미칠 악영향 △중국정부의 우려와 제중탈북자에 대한 탄압의 증가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 인권관련 단체들 간의 과다경쟁 등을 지적했다. 조 씨는 앞으로 국내민간단체들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개입은 북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 민주주의법(2003), 이라크 해방법(1998), 쿠바 자유·민주연대법(1998) 등을 제정한 바 있다.

**북 인권 개선, 경제 회복과 주민의 주체적인 힘으로**

북한인권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씨는 "미국이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권은 정치적 명분이나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에는 인권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경제·군사적 공세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개입의 첫 단계로 향후에 북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북 인권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짚어야 할 유의점도 논의됐다. 김 씨는 "남한에서 북 인권이 다뤄지는 배경이 냉전적 반복 이데올로기와 남북관계의 파탄을 정치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뒤 "남한 민간단체들은 북 인권의 실상이 어떤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북 인권 상황에 대해 그 정도와 사실성 여부는 사실에 입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씨는 "장기적으로 북 인권의 신장은 북 경제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내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민주화 주체로서 북 주민의 의식과 실천이 발전되는 경로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시기 북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중대를 통해 북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원에서 분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화영 씨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권이며 미국정부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꼭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이 씨는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아프카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영상자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방송했고, 2003년 2004년에도 북의 인권을 집중 방영하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북 인권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늦었지만 관심과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작은 희망을 가진다며 실천 방안으로 "NED의 지원을 받는 보수적인 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미 의회와 민간단체 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단체들이 탈북자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공유하고 △미국 내 진보적 의원, 민간단체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진보적인 인권, 평화,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북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처음으로>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이던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 적용에 있어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수용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조심스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적단체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민애청이 '자주·민주·통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규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 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밑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모임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춘 점 정기 총회나 학술토론 자료 중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로 삼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대법원은 그동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 등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도 이적단체로 판단해 왔다. 김 변호사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판단에서 법원이 변화를 보이는 징조가 아닌가 싶다. 편협한 기존의 논리에서 진전된 변화로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역시 "과거 대법원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북한 주장에 담긴 어휘를 사용해 규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

한 사건까지도 유죄로 번복해왔던 것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조선까지 5월호, 민에청 10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8년 11월 한대웅 씨 등 민에청 회원 9명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거 기각되면서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감청, 무리한 수사 등도 비난을 받았다.

<기사 처음으로>

##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운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15일 (목)  
제 26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 |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생체정보' 안전한가?
2.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3.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4.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 '생체정보' 안전한가?

###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정보로 본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취약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킹, 참여연대 등은 14일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통제-유전자 디비틀 중심으로'란 주 발제를 시작으로 'US-VISIT과 화상인식기술, 미아찾기 유전자디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문 정보의 오·남용 사례'가 집중 검토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신원확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며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디비(미아찾기, 이산가족찾기, 군대)와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씨는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 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에 따른 활용은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디비로 구축해 유전자 정보를 집적, 관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유전자 감식기술의 사회적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핑계로 조선족 동포들 수십 명의 유전자를 반강제로 채취했다. 유전자 감식과 디비가 표면적으로 특정집단에게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의 분석과 저장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반강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진보네트워킹 장영경 활동가는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씨는 "생체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몰래 수집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집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내 생체정보개발자,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생체정보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문인종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이 '최적'이다. 만약 이런 기술을 부정한다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킹 오병일 사무국장은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생체정보 기술 도입이 저렴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생체정보 활용이 최후의 불가피한 상황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쓰여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식이 선행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처음으로>

##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했다.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당시 첨부 공개한 '수능100만 통계(EBS-0709).xls'라는 파일 중 '최고령최저나이이용자' 현황에는 수능방송 최고령 이용자 130명과 최저나이 이용자 130명의 신상정보가 들어있었고, 이 파일은 13일 오후 4시경까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항의에 뒤늦게 개인 신상 부분을 삭제했지만, 이미 260명의 개인 정보가 5일 동안 인터넷에 공개되고 난 후였다.

교육부의 행태에 정보인권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빚은 사건'이라며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보인권단체들은 EBS에 가입한 이용자의 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해 "EBS와 교육부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공한 것으로 명백하게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14일 안병영 교육부장관, 고석만 EBS사장, 교육부 및 EBS관계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처음으로>

##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입시국회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파병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14~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 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소관 국방 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20여 명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1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를 외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행동이 주최한 '평화대행진'에 앞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진행되었다. 또 12일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를 배에 싣는 작업이 진행된 부산항 8부두 앞에서는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이 이라크전쟁에 동참하는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를 막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도 13일 1만6,638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교사시국선언'을 통해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이라크전쟁 참전 방침의 전면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 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파병을 철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14일 오전 7시 30분 경 용인동백지구에서 파업 중이던 경기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2명이 모두 연행됐다.

지난 12일 새벽 5시 30분 용인동백지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현장 최초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중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불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

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이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동백지구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일요일 유급휴무 보장 △직종별 임금하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노조원들은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37명,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9명, 인천건설노조 조합원 4명, 경기중부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이고 이들은 연행 후 현재 용인경찰서, 화성경찰서 등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상태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정 단체협약 인정'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서부노조 김호중 위원장 등 노조원 6명도 이날 연행됐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